

## ■ ( 언론 동향 ) 2021.12.6. "서울경제" 보도

### ○ "치솟는 원자재값에 적자 쌓여...이번에도 납품가 못올리면 문닫을 판"

- 계약기간 동안 인상분 반영 사실상 불가
- 업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절실" 호소

대기업이 내년 공산품 가격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중소기업은 연말을 맞아 대기업과의 납품 단가 협상에서 원자재 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을지 초긴장 상황이다. 이미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원자재 가격으로 채산성이 악화된 중기는 내년까지도 납품 단가가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 '한계기업'이 급증하는 것은 물론 줄도산을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중기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해서 그 중간재를 납품하는 구조가 대부분인데 매입원가가 매출원가보다 높아졌다"면서 "원자재 가격이 50%에서 많게는 100%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철강 업계의 한 관계자는 "소규모 단조 업체의 경우 포스코가 올해만 철 가격을 네 번인가 다섯 번이나 올렸다"며 "한 번만 더 올리면 시위를 한다고 한 후로 인상 통보를 안 한 것 같다. 이제 한계에 내몰린 기업이 너무 많고 이대로는 많은 기업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이 납품 단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중기 도산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이처럼 높은 상황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이 절실하다는 게 업계의 호소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은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기의 경우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채산성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며 "결국 납품단가 연동제는 상생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추 본부장은 이어 "결국 대기업도 협력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경쟁력이 강화된다"며 "대기업이 상생 차원에서라도 납품 업체의 원가 상승분은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도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단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이를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김경만 민주당 의원은 최근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생협력법)'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하도급법)' 2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 연승 기자 >